■ 정부, 광주·전남 현안사업 줄줄이 외면 … 비난 고조

고속철 계획조차 못내놔 … 조기 완공 차질

문화콘텐츠진흥원 통폐합 장관 말바꾸기 일관

J프로젝트는 MB정부 역점 새만금에 밀려

정부 각 부처에서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대형 현안 사업들을 잇달아 외면하거나 제동을 걸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에서 제대로 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문화콘텐츠진흥원 통폐합 등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처 장관의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있어 '호남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고속철**=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아직 기본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채 내년 예산을 기존의 2017년 자금 계획에 근거, 편성한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2012년 완공이 가시화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도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편향적 산업화 영향 등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의 SOC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 지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F1 사업과 문화콘텐츠진흥원**=문화관광부는 최근 국회 국제경기지원 특위에 서면 보고를 통해 재정 타당성, 접근성, 과도한 부담 등을 근거로 F1 특별법의 제정 및 국고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문광부의 입장은 '아전인수격'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F1을 개최한 대부분의 나라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은 데다 F1 대회 개최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당초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통합되면 계획대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보여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기관인 CT 연구원의 설립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도 8개월 동안 공석으로 둔 뒤 최근에야 임명하는 등 지연 현안에 대한 명백한 '의지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J-프로젝트**=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간척지에 대해 농림부가 우량농지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조사에 나서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참여정부 시절,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전제로 간척지 양도양수에 조건부 동의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림부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농업용지 비중을 당초 7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일관성이없다는 비난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비중을 두면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이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특정 지역 편중의 정부 정책 방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호남은 단 1개의 경제권으로 묶인 반면 영남은 2개의 경제권으로 나뉘어 정부의 지원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여기에 선도사업도 영남은 10개인 반면, 호남은 5개에 불과하다. 특히 영남은 신규 사업을 중심에 포함시킨 반면 호남의 선도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기존의 계속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광역경제권 계획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호남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면서 국민 통합도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것이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가 17일부터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오른쪽)과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각종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감세법안, 수도권 규제완화법안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안심사 본격화 … 여야 쟁점 법안은

"과세 9억이냐 6억이냐" 종부세법 격돌

수도권 규제 완화법 놓고 논란 불가피

국회가 17일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로 손질이 불가피한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법인세와 상속세, 부가가치세 인하 등 '감세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 완화 등 이른바 '반(反)시장법'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정원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사이버모욕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대한 여야 간의 격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감세법안 격돌**=종부세법의 개정 방향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세 기준이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 이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부과 기준(6억원→9억원)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과세기준 6억원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기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세금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감세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극렬히 반대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30% 인하 등 이른바 '서민감세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反시장법' 충돌**=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해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의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뿐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

◇**수도권규제 완화법 논란**=정부여당이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발의한 법안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 없는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 약법'으로 규정하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촛불법안' 격돌**=한나라당이 발의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 소위 '촛불법안'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불법집회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반촛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수공항 확장 '조건부 추진'

"박람회 지원위원회 승인 조건 35억 반영 합의"

민주당 김성곤 의원 밝혀

정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했던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이 추진의 실마리를 찾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꺼려 왔던 국토해양부가 '조건부 추진'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김성곤 의원(여수 갑·사진)은 "지난 14일 국토해양위원회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의 승인을 조건으로 여수공항 활주로 400m 확장 설계비 3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국토해양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정부지원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여수공항은 중·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증축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현 여수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천100m에 불과해 300인승 이상 국제선 항공기의 취항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최소 2천500m로 활주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일단 '조건부 추진'으로 입장 변화를 보임에 따라 활주로 확장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남은 과제는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는 것. 지원위원회가 비록 여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긴 하나 기존의 정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입장 번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따라서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원위원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별관 철거땐 기념비·상징물 건립해야"

광주창조도시硏 창립 포럼

김기곤 전남대 연구원 제안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 내 옛 도청 별관 철거-보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별관을 철거해야 한다면 차선책으로 기념비나 상징물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기곤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17일 전남대 인문대 1호관 학술회의실에서 열릴 '광주창조도시연구소' 창립 포럼에 앞서 16일 미리 배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광주문화도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5월 항쟁의 공간인 도청 별관의 보존은 제일의 원칙이지만, 장소의 정체성은 5·18 정신이 인권과 평화의 의미로 확장되듯이 항상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될 수 있다"며 "별관을 철거해야 한다면 5월 정신을 담은 별관이 문화적 매체를 통해 상시 기억될 수 있도록 철거부지에 일종의 기념비나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념비나 상징물에는 5·18 공간의 보존을 위해 사회·정치적 투쟁을 주도했던 실천주체들의 행위까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특정 역사적 공간이 과거와 미래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그 의미를 확장했는 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광주문화도시 조성의 이념적 근거가 되는 5·18 공간의 물리적 보존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무력화하려는 망각에 대한 저항과 그 가치를 문화적 측면에서 삶의 자산으로 재현하려는 다양한 '기억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소수 관료나 특정정치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이 문화도시 조성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